

[민중총궐기 4보] 가짜권력 압도한 진짜권력, 100만 군중 민중총궐기 뭘 요구하나?

박성식 | 승인 2016.11.12 22:04

국민권력이 심판하는 날, 퇴진 비롯해 13개 분야 요구안과 특별요구안 발표



100만 군중은 사진으로 담을 수 없다. 역사에 담긴다.



끝없이 밀려드는 행진대열 ... 역진불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시민군중이 모였다. 행진을 이끌던 사회자는 “압도적이며 전율을 느낀다!”고 전했다. 시민들은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핸드폰 불을 켜고 촛불을 높이 들며 일제히 함성을 외쳤다. 시청에서 외친 함성이 청와대까지 들린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하나의 함성 “박근혜 퇴진!”이다.

- 군중에 압도된 언론 대회규모 전하기에 급급

엄청난 군중의 함성을 모아낸 계기가 됐던 민중총궐기는 대통령 퇴진과 더불어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대다수 언론은 그야말로 가늠할 수 없는 군중에 압도돼 주최 측에 그 규모를 묻기에 급급하다. 민중총궐기 대회에서는 노동자를 대표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옥중 서신이 낭독됐고, 전체 민중을 목소리는 대회선언문을 통해 밝혀졌다.

2015년 민중총궐기를 일으켰다가 징역 5년이라는 부당하게 중형을 선고받고 정치적 옥고를 치르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오늘은 불법권력 비선권력을 국민권력이 심판하는 날”이라며,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민중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더 튼 민주주의를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 박근혜 해고, 새누리당 진압, 보수야당 경제

민주노총을 포함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대회선언문을 통해 오늘 100만 민중총궐기의 정치적 의미를 밝혔다. 투쟁본부는 “도탄에 빠진 비정상적인 사회를 민중 중심 사회로 만들기 위해” 다가오는 권력교체기에 민중과 시민들이 함께 나서자며, “해고돼야 할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박근혜”고 “재벌과 새누리당도 공범”이며, “경계해야 할 것은 무능한 보수야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오늘 대회를 통해 대통령 퇴진과 더불어 13대 분야 요구안과 3개의 특별 요구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요약해 추려보면

- ①일자리노동(노동계약·성과퇴출제 폐기 /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 ②농업(쌀 수입 중단 / 대기업 -LG 농업진출 중단)
- ③빈곤(노점단속·강제퇴거 중단 / 복지축소 중단, 복지에산 확대)
- ④청년학생(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 직업교육훈련생 차별 철폐와 노동법 교육 의무화)
- ⑤여성(혐오, 성차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건설 / 여성의 빈곤화, 비정규직 철폐)
- ⑥민주주의(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 폐지 / 국정원 해체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 ⑦인권(차별금지법 제정,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 ⑧자주평화(사드배치 반대 / 대북적대정책 폐기)
- ⑨한일 위안부합의 무효화 재협상 추진
- ⑩세월호(특검 의결 책임자 처벌 /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 ⑪생태환경(신규 핵발전소 건설 저지, 노후 핵발전소 폐기)
- ⑫사회공공성(철도 가스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
- ⑬재벌책임강화(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이다.

이밖에 특별요구안으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처벌 △한상균 위원장 석방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발표했다.



청춘총궐기!



더 이상 길가에 버려지지 말자



테크노 시위



분노



역동하는 행진



